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9년 8월 21일(수)

담당 조현수(

페이지

총 10매

제목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중증장애인의 삶의 변화 낙제점”

2019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대한 입장 및 공개질의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중증장애인의 삶의 변화 낙제점

- 8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적용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확대’ 라는 성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종합조사를 적용한 기존 수급자의 갱신조사 결과 월평균 지원시간이 확대되었고,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종전 지원시간을 유지할 것이라며 가시적 성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 우리는 ‘혹시나’ 기대했던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역시나’ 를 증명한 것에 불과해 씁쓸함을 넘어 ‘소귀에 경 읽기’ 의 답답함이 사무친다. 그간 전장연이 제기한 우려와 비판에 대한 반영은 커녕 기획재정부의 통제 하에 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통계수치만을 단편적으로 제시하여 마치 장애인 삶

의 변화로 포장하고 있음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처지에 비애를 느낀다. 특히 발달장애인종합대책에 대한 성과는 현장의 절박한 상황과는 동 떨어진 채 걸음마 수준을 ‘만족도 매우 높음’의 성과로 부풀리기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점① 하루 16시간까지 수급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있는가?

- 정부는 지난 6월 25일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종증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월최대 지원시간: (현행) 441시간(일14.7시간) → (변경) 480시간(일16.0시간)

-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토론회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최종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시간이 확대된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고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올해 4월 토론회 자료에서 제시한 모의 적용 588명 중에 16시간을 판정받은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 최근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게 약속한 최종증장애인에 대한 종합조사 모의평가마저도 실행 하루 전에 장애인정책국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된 바가 있다. 장애인정책국은 약속한 종합조사 모의평가마저 파기하고 무엇을 숨기고 싶어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에 이번 발표에도 밝히지 않는지 의아하다.

- 현재 종합조사 문항 및 점수산출식에 의거하여 하루 16시간을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산술적으로 다음과 같음. ‘기능제

한’ 점수 479점(총점 532점) 이상이며, ‘직장’ 을 다니고 있어야 하며, ‘독거’ 또는 ‘취약가구’ 이고 ‘이동에 제한이 있으며 승강기가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장애인이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종합조사표에 의해 최종증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산술적 계산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밝혀주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최종증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숫자 놀음은 말아주기를 요청한다.

[질의①] 기존 수급 갱신자 1,221명과 신규신청자 2,311명 중 활동지원 1등급(하루 16시간) 판정받은 장애인은 몇 명인가?

[질의②] 종합조사표에서 하루 16시간을 판정 받을 최종증장애인은 몇 명으로 예측되는가?

[질의③]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로서 책임져야 할 하루 24시간 종합조사표 반영을 계속해서 지방정부에게 책임전가만 되풀이할 것인가?

**사례 : 전신 사지마비 장애인
16시간 가능한가.**

○ 김○○씨(45세)는 지체장애 1급으로 27년전 사고 후 팔과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전신마비상태로 노모와 지내고 있다. 대소변도 스스로 불가능한 최종증장애인으로 거주하는 집은 이동의 제한이 없다. 밤을 잘 때도 2시간 마다 몸을 뒤집어주지 못하면 욕창이 생기기 쉬우며 지금까지 욕창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김씨는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희망과 기대가 절망으로 변하여 매

우 불안한 상태에 빠졌다. 그 이유는 자신과 같은 전신마비 장애인이 가족의 부담을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게 된 이야기들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다.’고 외치다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싫다며 탈시설하여 인천시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욕창 때문에 죽었다는 기억이 되살아나 죽을 것 같은 불안감에 빠져버렸다.

인천시에서 탈시설자립생활을 한 최종증장애인은 김씨와 같은 상태의 장애인이었고,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시간과 인천시의 추가 시간으로 24시간을 받을 수 있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인천시가 주었던 추가시간을 강제로 박탈당했고, 밤에 혼자서 ‘누운상태에서 자세 바꾸기’가 불가능해 욕창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종합조사표가 도입된다고 하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최종증장애인에게 24시간이 지원이 될 것은 기대했지만 그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잠자는 시간 하루8시간을 계산에서 빼고 하루 최고 16시간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두텁게 보호한다고 과대 선전한 것도 불편한데, 실제로 종합조사표에 의해 하루 16시간을 받는다는 점수는 목 위로 밖에 사용이 불가능한 김씨와 같은 최종증장애인도 받기가 힘든 점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욱 불안과 더불어 실망감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문제점② 평균에 가려진 피해들. 지원시간 및 대상확대라고 볼 수 있는가?

- 보건복지부는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대상자 1,221명 중 79.8%가 급여량이 증가했고, 단 1.0%만이 급여량 감소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보전’ 방안을 적용한 결과 및 급여감소 하락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 3년동안 종전 급여량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급여보전’ 미적용시 하락자 비율이며,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20%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종전 서비스 시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급)이 오히려 서비스 시간 하락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등급 1급인 장애인 중 하락된 비율은 21.7%이며, ‘급여보전’ 방안을 적용한 경우에도 2.0%가 하락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 13p.)

< 활동지원 급여변동 대상자 비율 >

대상자	종합조사 결과					
	급여보전 미적용			급여보전 적용		
	* 신규 수급자에게만 적용			* 갱신자만 해당. 한시적 미봉책		
	상승자	유지자	하락자	상승자	유지자	하락자
100.0%	79.8%	0.2%	20.0%	79.8%	19.2%	1.0%
1,221명	974	3	244	974	235	12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재구성

- ‘급여보전’ 방안은 종합조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적용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유사한 장애유형이나 상황에 놓여진 신규 신청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 보건복지부 자료 5p에 있는 신규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상황의 ‘중증 장애인(기존 1~3급)’의 평균 급여량이 99.3시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 갱신자와 신규신청자의 평균지원시간 차이는 무려 월 26시간 정도이다.

< 활동지원 신규 수급자 현황(7.1~8.7) >

구분	신청자(명)	수급자(명)	평균 급여량(시간)	평균 급여량(시간)
			* 신규 수급자	* 기존 수급 갱신자
경증 장애인	395	221	86.9	
중증 장애인	2,220	1,741	99.9	125.2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재구성

- 수급 갱신자의 월평균 지원시간의 경우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이 증가했다고 강조하지만, 이 역시 월 15시간 정도의 ‘급여보전’이 반영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기존 수급자의 급여증가를 강조하고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사례(에이블뉴스. “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 국민청원의 전말”)*를 놓고 볼 때 급여가 하락되는 사례 역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 기존 인정조사의 경우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이면서 독거이면 사회생활과 관계없이 월 390시간 판정. 하지만 종합조사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생활이 없을 경우 기능제한 점수 430점 이상 나오지 않으면 330시간에 불과하다.

- 신규신청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료 5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976명의 중증장애인 중 1,560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비율상 21% 가량이 수급탈락된 것이며, 경증장애인(335명)까지 포함시키면 약 24% 가량이 수급

탈락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 7p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현황’ 에서 활동지원을 보면, 이력관리 신청수가 443명 (11.3%)에 이르는데 이들이 바로 종합조사에 의해 수급탈락되었지만 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장애인이다.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 활동지원 신규 수급자 현황(7.1~8.7) >

구분	신청자(명)	수급자(명)	수급탈락 비율
경증 장애인	395	221	41%
중증 장애인	2,220	1,741	21%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재구성

- 보건복지부는 평균 수치 등 단편적 수치만을 제시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서비스 하락 또는 수급탈락의 경우들은 극히 예외적인 양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 [질의①] 수급 갱신자 중 ‘급여보전’ 적용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하락된 사례(12명)는 기존 시간 대비 월 몇 시간 삭감되었는가?
- [질의②] 수급 갱신자 중 ‘급여보전’ 미적용했을 시에 하락되는 244명의 평균 하락시간은 몇시간인가?
- [질의③] 신규 수급자 1,753명의 장애유형별 평균 급여량은 몇시간이며, 최고 급여량을 판정받은 장애인의 급여량은 몇시간인가?
- [질의④] 신규 수급 신청자 중 수급탈락된 장애인들의 장애유형별 인원 수는?

문제점③ 주간활동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변화를 만들어낼만큼 충분한가?

- ‘복지절벽’이라고 보건복지부가 표현하듯이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 보장과 소득보장은 중요한 문제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 특히 단순 돌봄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났고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해졌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절박한 상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평균 4시간 정도의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요구한 하루 8시간의 서비스 보장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 받고 있는 경우 시간을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하루 2시간 정도의 서비스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2,500명을 시작으로 '22년까지 1만7천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대상자 1,500명에 불과했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국회에 끊임없이 요구하며 쟁취한 결과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체 발달장애인의 20% 수준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1만명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 이렇게 대상자수 및 지원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통해 마치 발달장애인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포장이다. 하루 4시간에 불과한 주간활동서비스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자료 10p에 따르면 공공신탁 및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아니고,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라도 한다니 다행이라 생각하기에는 현실은 너무 절박하다.
- 주간활동서비스와 더불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소득보장일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연금 대상을 중복3급까지 제한하는 것을 중증장애인까지(1-3급) 확대 등 소득보장 제도의 변화 없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그 기다림에 중증장애인들은 생명의 선을 수없이 오락가락 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문제점④ 강화되었다는 전달체계가 실제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했다며 실정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신청주의’ 방식으로 인해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 못한 경우이거나 민간자원 연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가 강조하는 찾아가는 상담 등이 가능하려면 현장 일선의 인력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현재 반영된 예산은 극히 적은 실정이다. 특히 등록장애인 전체에게 활동지원 등 사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져서 신청과 수급심사를 담당할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민연금공단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사회복지 공무원의 노동 강도가 높고 이에 따른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던 일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과 함께, 현장에서 장애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력 확대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는 없어 보인다.